

시선

사설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 핵심가치 반영 환영

우리학교 교수업적평가제도가 최근 합동교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014년 9월 교원인사제도 개선 위원회를 시작으로 3년간의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새로운 교수업적평가제도는 학문계열별 특성을 고려하고 대학의 핵심 가치인 교육, 연구, 실적을 종합적으로 아울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전까지 교수업적평가제도는 연구 활동 평가가 중심이었다. 대학에 고용된 교수로서는 고용주의 의중을, 평가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자기복제나 논문 쪼개기 등 정량적으로 보이는 지표를 올리기 위한 편법이 행해졌다. 연구의 양을 평가하는 풍토는 해외 연구자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 우물을 파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진단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교수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연구에 방점이 찍혀있던 것은 비단 우리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요 언론 일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이후 대학들은 매년 이들이 발표하는 순위 하나하나에 울고 웃어야 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학평가 시 연구영역에 30%선의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대학평가는 교원 당 논문 수, 피인용 지수 등 ‘연구역량’을 정량화 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11년 전임교원의 담당강의시수를 기존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여주면서까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책임시수 축소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2014년 1월, 당시 안재욱 서울부총장은 책임시수 축소가 기대만큼의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의 결과, 그간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교육, 실천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연구 평가 역시 그 질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무처 등 관계 부처의 노력과, 논의에 참여한 교수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아직 결과는 모르기에 낙관적이지만 한 예측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변화의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대학의 핵심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개편이기 때문이다. 학문의 공동체인 대학은 서로의 지식에 깊이를 더하고 외연을 확장하며 이를 후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희대학교가 가지는 교육의 가치를 바라보며 매년 입학하는 4천여 명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대학에 지워지는 사회적 책무 또한 실천으로써 감당해야 한다. 대학의 본령을 생각한다면 이번 평가제도 개편은 진작 해야 하는 일이다.

이미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책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에 ‘논문 게재 건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전 세계 과학자 155명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저널 인용지수’를 평가에 반영하지 말자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역시 이제라도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나아가 이것이 대학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대학은 지금

공익을 위한 학교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 15일 고려대 제50대 서울총학생회(서울총학)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캠퍼스(서울캠)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몰카 영상이 유포된 것을 파악했다”(본교 화장실 몰카 촬영 의혹 제기 돼/고대신문, 2018.05.23) 서울총학은 “몰카 촬영 및 유포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캠에서 몰카 의혹이 제시됨에 따라 제13대 세종총학생회는 “교내 경비업체의 몰카 탐지기를 대여해 세종캠퍼스 내 화장실과 휴게실의 몰카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서울송실 재건기념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대회’에서 송실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인권센터 출범

인권센터, 타대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인권센터 출범이 3달 정도 남았다.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노조)은 “대학본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권센터 설립을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역시 그 필요성을 절감해 오는 8월 말까지를 출범 목표로 삼았다.

인권센터는 행정인력을 포함해 3~4명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그 상위 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생길 때에만 소집되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인원은 3~4명이 전부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모든 인권문제를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오롯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략적으로 양 캠퍼스를 오갈 예정이다.

다른 학교 인권센터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인력부족이 문제다. 지난해 인권센터를 개소한 연세대는 ‘인권: 생각에서 실천까지’라는 필수 교양 과목을 개설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재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상주해있는 직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인력난이 제기됐다.

인권센터가 대학본부에서 말하는 “인권을 깊이 있게 교육, 연구, 홍보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한명의 직원이 전문적인 연구, 학내 구성원 대상의 예방교육, 교육과 홍보를 전부 담당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또 현재까지 우리학교 인권센터의 계획을 들어보면 세분화된 부서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경우 상담소, 연구부, 교육부, 행정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해당 부서들이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인력을 전문적으로 배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3~4명의 인권센터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물론 본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인권센터가 개소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우려해 부서를 선불리 나눌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필요한 만큼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걸 안다. 대학본부와 노조가 말하는 “처음에는 뼈대대더라도 인권센터를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다만 인권센터가 ‘인권에 특화된 전문기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온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인권센터를 먼저 출범시킨 학교들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검토하며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

다 교인에 의해 무력으로 제압됐다.('이사장 퇴진' 기습 시위 발생... 일부 시위자 무력 제압돼/송대시보, 2018.05.21) 송실대 이사장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로 '송실 이사장 퇴진 행동'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세습을 저질러 교회의 사유화를 시도했기에 민주 교육 이념에 맞지 않다”고 한다. 한편 시위자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도 교인들에 의해 위협을 당했으며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학생은 수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유라 학사비리’로 구속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의 징역 2년 형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의해 확정됐다.(입시 비리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확정/이대학보, 2018.05.21) 정유라 학사비리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통해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고자 최순실 씨와 최 전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공모한 사건이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해 학사비리에 연루된 남궁근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편 학사비리 공모를 주도한 최순실 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서강대 총학생회가 지난 달 28일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공동행동에 참여했다.(본교 총학,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뽕은 맛>행진 동참해/서강학보, 2018.05.17) 해당 운동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뽕은 맛>’으로 학생의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진행됐다. ‘학생 손으로 총장 뽑고, 대학 민주성 확대하자’를 주요 구호로 삼은 <뽕은 맛>은 이대역부터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다음 달 18일 열린 예정인 제4차 이사회에서 서울대 총장 후보 최종 1인이 선정될 예정이다.(이사회 내달 18일 총장최종후보자 선출/대학신문, 2018.05.20) 서울대 당면직 이사인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6월 19일 까지 교육부에 최종 후보자 선출 결과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며 18일에 이사회를 여는 이유를 밝혔다. 제4차 이사회에서는 총장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50분간 개별면접을 실시 한 뒤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문제를 청년에게서 찾지 말라

세시봉

설지연 (국제뉴스팀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당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 공약이다. 청년 실업률이 10.7%에 육박했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한 명은 백수라는 말이다.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보면 취업을 위한 스펙 전쟁이 한창이다. 학점 관리는 기본에 어학, 공모전, 인턴까지 다들 바쁘게도 산다. ‘N포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러 공약 중 우리가 관심 갖는 주제는 아무래도 ‘청년 실업문제’였다.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라는 공통 질문에 각 후보는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금 지급’, ‘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장려’라는 답변을 내놨다.

창업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골목상권은 대기업이 장악한지 오래다. 영세상인이 주를 이뤘던 ‘분식점’마저 대기업이 손을 땀다.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그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 비슷한 상품을 심지어 더 좋은 가격에 내놓는다. 지난 2015년 ‘파리바게트’는 파주에 위치한 ‘프로방스 베이커리’의 마늘빵과 똑같은 제품을 출시했다. 해당 마늘빵은 프란치스코 교환 내한 당시 먹었던 ‘교환빵’으로도 유명했다. 이 마늘빵의 제조방식은 특허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파리바게트는 이 마늘빵을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논란이 됐다.

중소기업, 가고싶은 환경 만들어야

창업에 실패했을 때 떠난아야 하는 위험 또한 너무 크다.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사회에는 실패했을 때 ‘오독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 위험성을 해결해주지 않은 채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점입가경으로 한 후보자는 “고학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치가 높아 실업률이 높다”라는 발언을 했다. 많은 대학생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것이 그저 ‘눈이 높기’ 때문일까. 눈이 높아져 취업이 안 되는 것이 과연 우리 청년만의 탓일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복지 차이, 발전성을 따져 본다면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중소기업을 청년이 원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 생각이 없고 그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만을 맞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대기업의 상권 침해, 안전망 부족, 기업 간 격차 등 구조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나면 해결책을 입에 담기는 쉽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까. 문제점을 ‘청년’에게서 찾지 말라.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21